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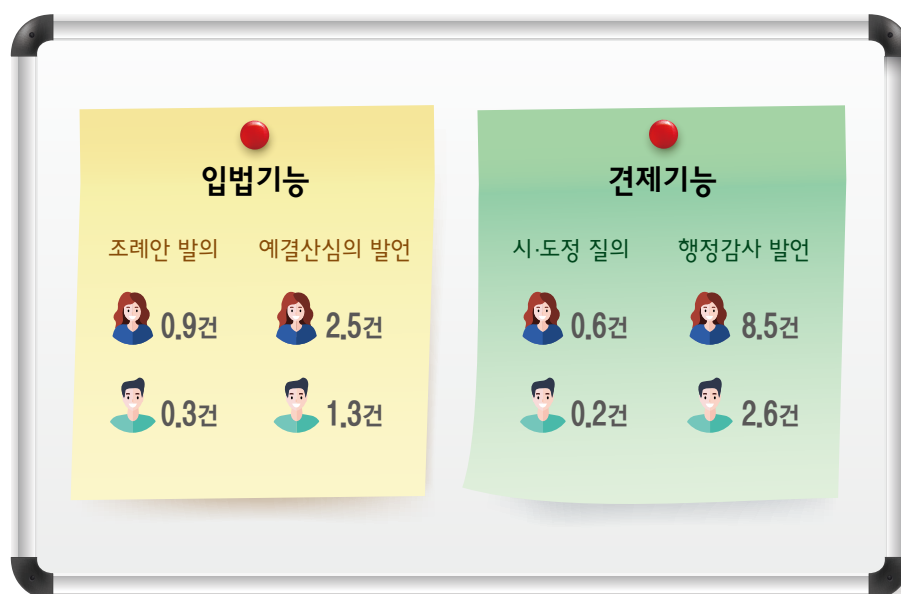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2018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7 / e-mail: kekkekek@kwdimail.re.kr)

지방의회의의 여성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대표성의 선순환 확인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 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2) 의정활동 분석 결과
 - 가. 여성의원 비율과 양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현황
 - 나. 주제별 양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현황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

남녀의원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의정활동 분석결과 종합



- 현재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4.3%(지역구 58명, 비례대표 55명)로, 국회 여성의원 비율 15.7%, 기초의원 여성비율 25.3%와 비교하면 선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임. 양성평등관련 의제들은 보통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여겨지는데, 광역의회에의 여성 참여율의 저조는 이러한 이슈들이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낳음. 이에 본 연구는 의회 규모별로 여성의원 비율이 최소 10%대 이상인 지역의 광역의회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7개 지역을 선정하고, 광역의회 남녀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논의되는 의정활동(입법활동과 견제활동)을 양성평등 관련 8개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

〈남녀의원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의정활동 분석결과 종합〉

단위 : 1인당 발의/발언 건수

		여성	남성
입법기능	조례안 발의	0.9	0.3
	예결산심의 발언	2.5	1.3
견제기능	시·도정 질의	0.6	0.2
	행정감사 발언	8.5	2.6

그 결과, 첫째,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의정활동에서 여성의원의 활동이 남성의원보다 2-3배 많았음. 둘째, 여성의원인 많은 광역의회에서는 남성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도 활발했음을 확인함. 이는 여성의원들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활동이 남성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심분야에서 남녀의원 간 차이를 발견함. 남성의원들은 안전/폭력, 가족정책 복지/건강의 순으로 조례발의나 행정감사 발언을 많이 한데 반해, 여성의원들은 안전/폭력, 양성평등/대표성, 일가정양립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의원들의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안전/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양성평등/대표성 문제와 일가정양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대변해주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음. 또한 양성평등 정책이 지방의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의원인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이에 광역의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과 5항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정당의 경선제도의 규격화 및 가산점 확대와 제도화를 제안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 ☑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잇는 중간자로서 중앙의 양성평등 정책이 기초자치단체까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광역의회는 입법 활동과 견제 활동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관점을 의회에서 활성화시키고 확산시킴에 있어 여성위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4.3%(지역구 58명, 비례대표 55명)로, 국회 15.7%, 기초의회 25.3%와 비교시, 선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임. 14.3%는 최소한의 크리티컬 매스인 15%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의회 내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부문에 양성평등 관점을 투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 의회에 여성의원 비율 증가가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복지 및 여성 관련 분야의 의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음. 또한 여성 의원은 남성의원과 다른 관심 영역, 주민과의 친밀성, 여성공약 제시, 양성평등의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선행연구결과들이 있음. 즉, 여성위원의 양적 대표성 증대가 어느 정도 실질적 대표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대표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 여성의 참여가 더욱 더 증가해야 함. 이를 위해서 당연히도 여성이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당의 입후보자로 공천된 여성후보자가 많아야 함. 현행 정당 스스로 그리고 법률로 마련된 여성정치인 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마련하고 있는 각종 여성공천 할당 노력을 개선시키고 선거법 및 헌법 등에서도 정책결정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가 왜 필요한가, 그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광역의회 의원에서 양성평등정책 관련 의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봄.
- 17개 광역의회 중 7개 의회를 대상으로 분석함.
 -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의회 규모별로 여성의원 비율이 최소 10%대 이상인 지역의 광역의회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7개 지역을 선정함.
- 광역위원의 역할 중 입법 활동과 견제 활동에 주목하여, 이 두 영역에서의 여성의원 및 남성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주제에 대한 활동 양태를 네 개 분야로 나눠서 살펴봄.
 - 입법 활동은 조례 제·개정 발의건수, 예결산 심의에서의 관련 발언건수를 통해 살펴보고, 견제 활동은 시·도정질의회와 행정감사에서의 관련 발언건수를 통해 살펴봄.

■ 분석대상이 되는 조례나 발언의 내용을 양성평등관련 주제 8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봄.

〈연구의 분석 대상 및 내용〉

분석 대상 의회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충북, 전북, 경남 (7개 광역의회)
분석 대상 의정활동	입법기능(조례, 예결산심의) 견제기능(시/도정질의, 행정감사)
분석 대상 내용	양성평등 관련 의제 (일가정 양립, 일자리, 안전/폭력, 복지/건강, 가족, 양성평등, 대표성 등)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7대 과제에 가족을 포함함.

2) 의정활동 분석 결과

- ▶ 의정활동을 1인당 건수로 살펴봤을 때, 네 개 분야 모두에서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남성의원들보다 전반적으로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조례발의건수에 있어서 여성 0.9건, 남성 0.3건, 예결산심의에서 관련 발언건수 여성 2.5건, 남성 1.3건, 시·도정 질의 발언건수에서 여성 0.6건, 남성 0.2건, 행정감사 관련 발언건수에서 여성 8.5건, 남성 2.6건

〈남녀의원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의정활동 분석결과 종합〉

단위 : 1인당 발의/발언 건수

		여성	남성
입법기능	조례안 발의	0.9	0.3
	예결산심의 발언	2.5	1.3
견제기능	시·도정 질의	0.6	0.2
	행정감사 발언	8.5	2.6

가. 여성의원 비율과 양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현황

- ▶ 7개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과 네 개 분야에서의 의정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여성의원 비율과 양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1인당 건수〉

단위 : 명(%), 건

분류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충북	전북	경남	합	
총의원수		111	142	22	34	31	41	58	439	
여성의원	수(비율)	22 (19.8)	25 (17.6)	6 (27.3)	7 (20.6)	4 (12.9)	5 (12.2)	8 (13.8)	77 (17.5)	
	순위	3	4	1	2	6	7	5	－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건수		43	71	18	10	12	13	9	176
	1인당 발의건 수	남	0.4	0.4	0.8	0.1	0.3	0.1	0.1	0.3
		여	0.5	1.0	1.0	0.9	1.3	2.0	0.4	0.8
		총	0.4	0.5	0.8	0.3	0.4	0.3	0.2	0.4
	순위		3	2	1	5	3	5	7	－

예결산심의 양성평등 관련 발언	발언건수		36	159	20	17	77	48	38	395
	1인당 발언건 수	남	0.2	2.1	0.7	0.5	2.5	1.4	1.1	1.2
		여	1.3	3.6	2.5	1.6	5.5	2.8	1.0	2.3
		총	0.4	2.3	1.1	0.7	3.0	1.7	1.1	1.4
	순위		7	2	4	6	1	3	4	-
시·도정질 의 양성평등 관련 발언	발언건수		20	60	2	6	5	14	6	113
	1인당 발언건 수	남	0.1	0.3	0.0	0.0	0.1	0.3	0.1	0.2
		여	0.3	1.0	0.3	0.7	0.3	0.6	0.1	0.6
		총	0.2	0.4	0.1	0.2	0.2	0.3	0.1	0.3
	순위		3	1	6	3	3	2	6	-
행정감사양 성평등관련 발언	발언건수		354	735	55	87	195	88	56	1570
	1인당 발언건 수	남	2.4	3.8	1.4	1.9	4.0	1.8	0.5	2.6
		여	6.4	11.8	5.3	5.3	21.5	4.6	3.9	8.4
		총	3.2	5.2	2.5	2.6	6.3	2.1	1.0	3.6
	순위		3	2	5	4	1	6	7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 각 해당 지역 광역의회 홈페이지 현역의원 현황; 의안정보

▶ 네 개 부문 의정활동 모두에서 여성의원인 남성의원보다 적극적임(경남도의회 의원예결산심의 부문 제외).

■ 광역의회에서 여성의원인 양적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근거 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원인 실질적 대표성, 즉 여성의 권익 증진과 목소리 대변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고무적임.

▶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광역의회에서 남성의원들의 여성관련 입법활동도 활발함.

■ 조례안 발의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광주(27.3%, 1위)와 서울(19.8%, 3위)의 경우, 남성의원들 역시 여성 의원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줌.

- 광주의 경우, 여성의원 1인당 발의건수 1.0건에 비해 남성의원도 0.8건의 조례안을 발의함.
- 서울의 경우도 여성의원 1인당 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데 비해, 남성의원도 0.4건의 조례안을 발의함.
- 한편, 대구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20.6%, 2위)과 여성의원인 의정활동(0.9건)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원 발의는 0.1건으로 예외적임.
- 남성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여성의원인 활약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남성의원들의 양성평등 관련 입법 활동도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예결산심의에서도 여성의원인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한 충북(5.5건)과 경기(3.6건) 지역의 경우, 남성의원 1인당 발언건수 역시 각각 2.5건과 2.1건으로 7개 지역 평균 1.2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줌.

■ 이는 여성의원인 의정활동에서의 적극성이 양성평등 관련 의제에 대한 의원 간 소통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이 주제에 대해 민감성과 친밀성이 확산됨에 따라 남성의원들의 여성관련 주제에 대한 입법 활동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견제활동 모두에서 7개 지역 합산 여성의원인 1인당 발언건수가 남성의원인 1인당 발언건수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다만 여성의원 비율 순위와 견제활동에서의 여성관련 1인당 발언건수 간에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음. 이러한 점은 지역별 환경의 차이, 여성위원을 비롯 의회의 인적 구성 현황, 정당 구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시·도정질의 경우, 여성위원의 1인당 발언건수가 7개 지역 총 0.6건이었고, 남성 의원은 0.2건이었음. 광주 지역에서는 남성위원의 발언이 아예 없었고, 경남지역은 남녀 의원의 1인당 발언건수가 0.1건씩으로 동일함.
- 행정감사의 경우, 남성위원의 1인당 발언건수가 7개 지역 총 2.6건인데 반해, 여성위원은 8.4건으로,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발언을 하였음. 각 지역별로도 여성위원의 1인당 발언건수가 남성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 하지만 행정감사 양태를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여성위원이 참여한 상임위와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 간에 양성평등 관련 의제 발굴에 차이가 있음.
 - 광주의 경우, 여성의원 1인당 발언건수 1.0건에 비해 남성의원도 0.8건의 조례안을 발의함.
 - 서울시의회 경우, 도시안전건설위와 도시계획관리위에는 여성위원이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난 3년간 행정감사에서 양성평등관련 주제에 대한 발언이 1건도 나오지 않았음. 반면, 다수의 여성위원이 참여한 기획경제위와 보건복지위는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양성평등관련 주제 발언이 제기되었음.
 - 경남도의회 경우 전반적으로 저조한 발언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많은 수의 여성위원이 참여한 문화복지위에서 가장 많은 양성평등관련 주제 발언이 있었음.
 - 따라서 상임위의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관련 주제 발언의 순위가 정관계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나. 주제별 양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현황

▶ 7개 광역의회에서 제기한 양성평등 관련 의정활동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제별 양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단위: 건)

활동	성별	일가정 양립	일자리	안전 /폭력	복지 /건강	가족 정책	양성평등 (성인지)	대표성	기타	합계
조례안 발의	합	16	8	48	25	33	19	24	3	176
	남	9	3	34	18	24	8	13	2	111
	여	7	5	14	7	9	11	11	1	65
예결산 심의	합	34	48	70	30	102	79	31	1	395
	남	21	30	53	25	87	37	20	1	274
	여	13	18	17	5	15	42	11	0	121
시·도정 질의	합	17	12	35	12	22	8	4	3	113
	남	5	7	23	8	17	6	1	3	70
	여	12	5	12	4	5	2	3		43
행정 감사	합	228	182	457	102	247	181	158	15	1570
	남	125	102	282	74	166	102	70	5	926
	여	103	80	175	28	81	79	88	10	644

※ 출처 : 각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예결산심의위원회 회의록/시·도정질의/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 조례안 발의의 경우, 7개 지역에서 대체로 안전/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 서울, 광주, 충북, 경남에서 안전/폭력과 관련된 조례안 발의건수가 1순위였으며, 나머지 세 지역에서도 2-3순위임.
 - 전국적으로 젠더폭력과 아동학대 등이 이슈화되었고 이에 따른 일반적인 관심의 수준이 높아진 것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원 대다수가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여성의 권익과 목소리 대변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 예결산 심의의 경우, 조례안 발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위원회에 의한 양성평등(성인지) 주제의 발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임.
 - 이는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제도 실시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예결위 구성에서 남녀의원 간 수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성인지)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위원이 훨씬 더 많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여성위원이 여성에 대한 실질적 대표성 역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양성평등(성인지) 주제에 대한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남녀의원 간 인식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기도 했음.
 - 성비균형을 통한 양성평등 추구라는 측면에서, 남성의원들은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음. 예를 들어, 여성이 많은 분야에 남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여성의 전당이 있으니 남성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침.
 - 반면, 여성의원들은 남녀 간 차별이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장 발언이 많았음.
- ▶ 시·도정질의에서도 안전/폭력 주제 질의가 가장 많았고, 남녀의원 모두에서 1순위 주제였음.
 - 2순위로 남성의원은 가족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에 여성 의원은 일가정양립에 관심을 기울였음.
 - 대표성 주제와 관련해서는 남성의원에게서 1건의 발언이 있었던 반면, 여성 의원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3건의 발언이 있었음.
- ▶ 행정감사에서도 안전/폭력에 대한 발언이 전체 발언건수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음.
 - 차순위에서는 남녀의원 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원은 가족정책에, 여성 의원은 일가정양립에 관심을 기울임.
 - 마찬가지로 여성 의원은 3순위에 대표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시·도정질의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 의원이 일가정양립과 대표성 주제 관련하여 더욱 반응성이 민감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 양성평등정책 관련한 의정활동이 여성의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광역의회에 여성의 참여는 그 당위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양성평등정책이 광역의회 차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결론 역시 얻을 수 있음.

■ 모든 여성위원이 유권자 ‘여성’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일가정 양립 문제와 대표성 문제 그리고 안전/폭력에 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임. 여성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대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3. 정책제언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개정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각각 나눠서 여성 30% 의무할당

■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

- 광역과 기초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연동하여 여성할당을 하도록 규정
- 정당은 이 조항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요 정당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주로 기초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 국회와 기초의회 등 각급 의회 중 가장 낮은 여성의원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구분하여,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30%,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30%를 공천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개정 제안〉

건설 유형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현행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0.3. 12.>
개정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개정 : 노력조항을 의무조항으로

■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 본 조항은 2010년 신설된 것으로 지역구 30% 여성 할당을 권고하고 있음.
- 강제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30% 노력조항은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동법 제52조 등록무효 조항과 연동시켜 강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광역의회 의정활동에서 ‘선수’ 요인이 네트워크 운영과 경험에 따른 전문성 향상, 의제선점 기회 차이 등 의원 역량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로 나타남. 그러나 현재 광역의회 여성위원의 약 60%가 초선이며, 이들이 개인의 역량 이외의 이러한 선수 요인으로 인해 의정활동에서의 영역에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시, 전현직 여성위원이 적어도 30%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개정안〉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현행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0.3. 12.>
개정 1안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만 한다.
개정 2안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만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시 여성후보 중 전현직 여성 의원이 적어도 30%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 경선 가산점의 제도화

- 현재 주요정당 중 여성후보에 대한 경선 가산점 제도가 당헌당규에 명문화되어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임. 자유한국당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있지 않았고, 국민의당의 경우 가산점 관련 당규가 있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이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각 정당이 경선 가산점을 확대 및 제도화하고, 후보자의 선출직 출신배경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주요정당의 여성 후보자 경선 가산점〉

정당	주요 내용
개정안	광역의회 지역구 후보자 경선 참여시 여성후보 가산점 제도화 - 지역구 초선 출마시 30% : 기초의원(비례, 지역구)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때 : 광역의원(비례)이 광역 지역구에 출마할 때

▶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 경선방법의 규격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남녀의원 모두 경선에 드는 비용과 조직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토로함. 게다가 경선방식이 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자들 간의 합의 또는 지역구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경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비용과 조직과 더불어 경선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정당은 후보자의 수, 지역구 당원 수 등 기준에 따라 일정정도 규격화하여 후보자들이 예측가능한 경선제도 및 일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정당의 경선방법에 대한 당헌·당규〉

정당	주요 내용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구별, 후보자 수별, 유권자 인구 및 당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별 광역의회 및 기초의원 의원 후보자 경선 방식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에 결정하여 공지함.

4. 기대효과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및 제5항 개정

- ▶ 제 47조 제 4항 개정안 1. 현재 30% 할당 미이행시 취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30% 할당을 의무가 아닌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으로 마련해 놓아, 법의 실효성이 없음.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면, 일차적으로는 상위법을 따르고자 하는 기관들의 속성상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 제 47조 제 4항 개정안 2. 의정활동에 '선수'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시, 전현직 여성의원원이 적어도 30% 포함되도록 개정하면,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정운영 역량을 의회 내에 발휘함으로써 여성의원원의 정치적 세력화 강화 및 양성평등관련 의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임.
- ▶ 제 47조 제 5항 개정안. 현재, 지방선거시 기초의회에 집중되어 있는 정당의 여성후보공천 비율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모두에서 30% 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 여성 후보자가 확대되면, 그 만큼 여성 당선자도 늘어나게 될 것임. 따라서 현재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 중 가장 낮은 여성의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정당의 경선제도 규격화 및 명문화

- ▶ 경선 가산점 부여 명문화. 각 정당의 경선 가산점을 제도화하고 그 가산점 부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여성후보의 공천율을 높일 수 있음. 이는 이후 여성의원 비율의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음.
- ▶ 경선방법의 규격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경선의 일정과 방식을 지역구위원장의 재량이나 경선 참여자의 합의에 맡기지 않고 당규로 후보자의 수, 지역구 당원 수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정도 규격화하여,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나 다음 선거에 재도전하려는 자들이 선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4년 내내 경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의 공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음.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의회	http://www.smc.seoul.kr/main/index.do
광주광역시의회	http://council.gwangju.kr/
대구광역시의회	http://council.daegu.go.kr/source/korean/main/main.html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main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source/korean/main/index.html
전라북도의회	http://www.assem.jeonbuk.kr/index.do
경상남도의회	http://www.gncl.or.kr/source2014/korean/main/main.html

참고자료

김은경 · 김혜영 · 김원홍 · 전선영(2017). 2018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